

與 “노상원수첩·외환죄” 등 의혹 산더미”…2차 종합특검 추진

민주 원내대책회의…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후 조사 범위 등 결정
내년 1월 임시국회 이후 처리할 듯…경찰과 수사 범위 조율 등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관련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징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뒤에 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가 위한 논란 속에 자연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 카드를 내세워 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굳건함을 부각 하려는 ‘집토끼용’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흐트러진 대 야 공세 전선을 가다듬고, 정국의 초점을 ‘계엄 책 임론’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도 읽힌다. 민주당은 애권의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경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종합특검 대상에 올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특검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국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수사기초 분리 원칙상 경찰에 넘은 수사를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종합특검이 출범할 경우 기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조율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가르마를 제대로 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법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언주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의원 3인,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양부남·안도걸·전진숙 선정…민생·현안 해결 앞장 평가



광주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양부남(광주 서구을), 안도걸(광주 동남을),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점검에 주력했다. 김보디아 내 한국인 납지 사건이 급증 했음에도 인력 충원이 없는 차안 공백 사태를 꼬집었고,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출속 추진과 안전점검 부실을 질타했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공무원 유튜버 겸직 기준 마련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안도걸 의원은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점검하며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는 한편, 글로벌 통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제안해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벤처기업협회가 수여하는 ‘2025 올해의 벤처상’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한 전진숙 의원은 의료 대란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필수 의료 병고 실태를 파헤치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요양원의 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은 유족에 상속세 공제해야”

12·29 여객기참사특위, 30일 결과보고서 채택…국토장관 “협의하겠다”

여야는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합의로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 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

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광주 대 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

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용인 송전선로 건설, 수도권 집중 고착화”

혁신당 광주시당 “반도체 산단 전력 인프라 구축 전면 재검토 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 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전력 인프라 건설 계획에 대해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는 과거식 해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16일 논평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고압 송

전선로 건설 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이라는 국가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 산단을 조성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 수급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 최대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송전·변전 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정 앞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근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광주 본량지역 송전탑 반대대책 위원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주민·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텁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